

“상습 침수지역 선제 대응...시민 생명·재산 보호 총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취약지역을 찾아 배수시설과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집중호우 대비에 나섰다.

민 시장은 지난 3일 서구 유촌동 동남아파트 일원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수관로와 배수시설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침수 예방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6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유촌동 동남아파트 일원은 광주전 지방

및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광주전 수위가 상승할 경우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구조적 특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 사이 2020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된 상습 침수 취약지역이다.

민 시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추진 중인 침수예방대책을 직접 설명하며 우기 동안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민 시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경향

민형배 시장, 장마 앞두고 유촌동 침수취약지 살펴 단기 압송관로 설치 완료...‘유촌지구 정비사업’ 추진

이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단기·긴급 조치와 중장기 정비사업을 병행해 침수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동남아파트 주변 압송관로 설치 등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입해 분당 5㎡ 규모의 수중펌프 등 배수시설을 확충했다. 또 올해 상반기 동안 유촌지구 내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 18개소에 차

고 판단, 단기·긴급 조치와 중장기 정비사업을 병행해 침수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동남아파트 주변 압송관로 설치 등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입해 분당 5㎡ 규모의 수중펌프 등 배수시설을 확충했다. 또 올해 상반기 동안 유촌지구 내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 18개소에 차

수관을 응급 설치하도록 지원했다.

민형배 시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경향이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단기·긴급 조치와 중장기 정비사업을 병행해 침수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동남아파트 주변 압송관로 설치 등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입해 분당 5㎡ 규모의 수중펌프 등 배수시설을 확충했다. 또 올해 상반기 동안 유촌지구 내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 18개소에 차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저류조) 설치, 재해취약지역 정비 등 중장기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내 총사업비 854억원을 투입, 현재 광산구 우산지구 우산저류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 북구 문흥동성당 일원, 북구청 사거리 일원, 신안교 일원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송정지구 및 첨단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천정비 등에 대해서도 배수펌프장 설치, 신설 배수로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 재해취약지역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제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동구청장배 체조대회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 이 대통령, 권역별 투자계획 발표 후 첫 추진전략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추진 전략을 직접 점검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가 6일 청와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강홍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윤범 정책실장, 정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이 회의는 이 대통령 주재로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메가프로젝트 세부 전략을 점검하는 첫 회동으로, 앞으로 메

가프로젝트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는 물론 지난 2일 충청권 국민보고회와 지난 1일 호남권 국민보고회에서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메가프로젝트를) 세심히 살펴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9일 청와대 보고회에서는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각 권역별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은 서남권에 896조원, 충청권에 392조원, 영남권 312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시재생 공모 곡성·해남 선정...지역 활력 높인다

국비 92억원 확보...생활환경 개선 본격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토교통부의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곡성과 해남군이 선정되면서 국비 92억원을 확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곡성과 해남군이 최종 선정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0개 대상지 가운데 전남 광주 지역 2곳이 선정됐다.

선정 대상은 곡성군 옥곡면 ‘사람과 공간을 잇는 죽림마을 죽림이여라’와 해남군 송지면 ‘533년 생활공간의 재생, 땅갈 거점마을 산정’ 사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해 지역 거점시설 조성, 정주환경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총사업비 83억원을 들여 옥곡면 죽림마을에 커뮤니티 플랫폼과 세어하우스 등을 조성한다. 인근 전남과



해남대학교와 연계한 지역 상생 기반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해 송지면 산정마을에 어울림센터와 도제문화 아카이브를 갖춘 마을전시관을 조성하고, 서해랑길 정비 등을 통해 역사문화와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마을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다.

고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안전민생부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확보가 관건

▶1면서 계속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줄여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확대 필요성은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한원자력학회회는 최근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넘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학회는 2050년 발전 수요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형 원전은 2031년

부터 2042년까지 매년 평균 1.67기씩 착공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은 2029년부터 2045년까지 연평균 0.71기씩 건설해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형 원전 건설에는 평균 7개월이 걸리는 만큼 미래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단지와 송전망, 용수 확보에 이어 원전 추가 건설 여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신안서 간담회

신안 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 ‘톡톡’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5일 신안군 안좌도의 안좌스마트팜앤솔라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태양광)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 매월 20만원(기본 15만원, 자체 추가 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재원정출형 사업모델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 사업에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도시 지역인 신안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전자제품 판매장과 환경정 등이 생겼고, 이동장터·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용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민형배 시장,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매주 참석

정부, 전남광주특별시장 배석 규정 개정 추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을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가 최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5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 시장은 다음 국무회의부터 정식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외 출장이나 공식 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시장이 대신 참석해 지역 현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9조에 근거한 국

가 최고 정책 심의·의결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국가 주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국무회의의 규정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민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현실화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의 창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국가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역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순천시 올해 첫 SFTS 발생 긴옷입기 등 당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과 등산객 등 야외활동이 잦은 시민에게 긴옷입기, 기피제 사용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첫 환자는 순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으로, 매실밭에서 농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27일 발열(37.9도), 오심, 구토, 기력 저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SFTS 확진진단 검사에서 양

성 판정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발생하며, 감염 후 2주 이내 38~40도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 SFTS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예방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